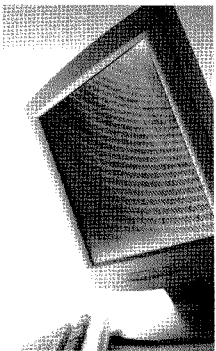


경영가이드



- 수평적 네트워크 전략에 눈을 돌려라
-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대·중소기업
- 세계 기축통화 논쟁 ... 그 앞날은?
-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끝났지만
- 금융쇼크 장기화에 대비해야
- 경영지식이 경쟁력의 원천이다
- 좋은 일자리의 정의

수평적 네트워크 전략에 눈을 돌려라



전 세계 경기 회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선진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동일본 대지진 발발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경제, 그리스 재정위기의 여파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 그리고 정부 부채한도 상한조정과 관련해 여야간 갈등을 보이고 있는 미국 등 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역할을 담당해야 할 주요국의 사정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세 진정 등으로 국내경기는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인플레이 확산 전망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 가능성 및 대외 경제불안 등에 따른 경제심리 악화는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 제조업은 산업의 공급사슬 하단에 위치해 있는 우리 경제의 풀뿌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혹은 동반성장 논의의 핵심도 바로 이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다름 아니다. 대기업 협력사 가운데 덩치가 큰 1차 협력사를 제외한 2차, 3차 협력사들이 바로 중소기업체다.

중소 제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자생력 확보 노력, 대기업과의 동반성장 전략 등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체 간 상호수평적 협력관계, 즉 수평적 네트워크 전략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중소기업 간 수직적 협력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동종 또는 이업종 간 협력 등 다양한 형태의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日 中企 수평적거래 증가세

일본의 중소기업은 1990년대를 전후로 대기업과의 수직 계열화된 ‘하청(下請)’ 관계에서 ‘횡청(橫請)’으로 불리는 개별기업 간의 수평적 거래관계가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는 엔고로 인한 대기업 생산거점의 해외이전 가속화가 계기가 됐다.

일본의 2003년 중소기업백서에 의하면, 일본의 하청 중소기업 비중은 1981년 65.5%를 피크로 줄어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하청생산을 담당해 온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특정 모회사에 편중된 의존 관계에서 거래를 다각화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중소기업청도 기존의 대·중소기업 간 전형적인 하청관계가 아닌, 많은 거래처와 다면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중소기업의 움직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는 기업간 거래의 ‘메쉬(mesh)화’와 부품소재의 ‘모듈화’ 흐름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메쉬란 그물망 또는 촘촘한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일본에는 도쿄 오오타구(大田區), 타마(多摩)지역, 하가시오사카시(東大阪市), 하마마쓰시(浜松市) 등으로 대표되는 가공형 중소기업 집적지가 있다. 이러한 집적지에는 10인 미만의 소기업이 80%가 넘을 정도로 압도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수평적 네트워킹 활성화돼야

이들 소기업은 전문가공 분야에 특화돼 있는데, 소위 ‘동료(仲間)간 거래’, ‘공장 상호개방 및 협의회(工場見せ合いかい)’라는 소통 메커니즘을 통

해 독특한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東成 일렉트로빔(株)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읽고 네트워크형 중소기업을 추구한 대표적 사례다. 1977년 일본 최초의 전자 빔 용접 가공을 전문으로 창업한 이 회사는, 특정 모듈부품을 일괄생산 납품해 달라는 한 대기업의 요청을 계기로, 재료, 가공, 프레스, 조립 등에서 탁월한 역량을 가진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각사에 비교우위가 있는 일을 할당·조율하는 ‘수평적 네트워크’ 전략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동사(同社)는 이업종(異業種) 간 연대에도 매우 적극적이어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5개의 중소기업을 연계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광역 네트워크 ‘5TEC.NET’를 결성해 주목을 받았다. 이 회사의 네트워크형 중소기업 모델은 일본의 1998년 산업 클러스터 계획 실현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일본경제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 중소기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공적인 네트워크형 중소기업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은 물론 정부의 정책적 관심도 중요하다. 세부적으로는 중소 제조업 클러스터 정책을 구상하고, 클러스터 내에 소위 ‘코디네이트 기업’ 군(群)을 발굴·지원해야 하며, 네트워크 내부의 응집력 제고를 위한 ‘신뢰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갑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대·중소기업



자본주의의 요체는 자유시장과 기업이다. 시장경제의 요체는 공정경쟁과 역동성이다. 경제이론에서 자유시장의 궁극적 지향점은 완전경쟁시장이다. 그 시장에서 사회적 후

생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공정한 경쟁의 담보와 경제주체들의 가치창출 기여에 대한 합당한 대가의 지불덕택이었다. 이를 통해 자본과 노동의 지속적인 투입을 유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고용과 소득의 지속적인 증대, 즉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최근 한 일간지에서 자본주의 재조명이 시도되고 있다. 자본주의가 고전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를 거쳐 따뜻한 자본주의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매우 의미 있는 문제의 제기이다.

아프리카 정글에 여전히 온갖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약육강식만이 아닌 공생의 생태법칙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맹수는 허기를 채울 정도만 사냥을 하고 과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위장병이 없다. 비만과 소화불량은 인간과 인간이 주인노릇을 하는 정부, 기업 등의 인위적 조직에만 있는 병이다.

협력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 이를 통해 얻어낸 대기업의 사상 최대 이익,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재벌 계열회사의 고속성장과 불법적인 부의 대물림, 포퓰리즘에 의한 과도한 정부 부채

등이 인간세상의 비만과 소화불량의 전형이다.

기업탐욕 경제 흔들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은 소득, 부, 일자리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면서 우리경제의 미래를 위협한다. 과도한 정부 부채는 영원할 줄 알았던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을 국가부도 위기로까지 몰고 있다.

경제학은 기업의 목표를 이윤 극대화라고 가르친다. 불변의 경제원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공정한 경쟁을 전제로 한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부당 내부거래는 분명히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그것은 시장을 왜곡하고,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방해하며, 시장경제의 역동성과 혁신을 저해한다. 중국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자유시장의 근본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미국의 저명한 자유주의 철학자 마이클 노박이 칭송한 '민주 자본주의의 근간이며, 부의 원천이고, 신의 축복'인 기업은 결코 부당 내부거래와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익을 독식하려는 탐욕스러운 기업이 아니다. 공정경쟁의 시장준칙을 지키고 자신들이 창출한 가치에 합당한 몫을 가지며, 나눔과 공생의 사회적 책임까지도 수행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공정경쟁이 시장경제 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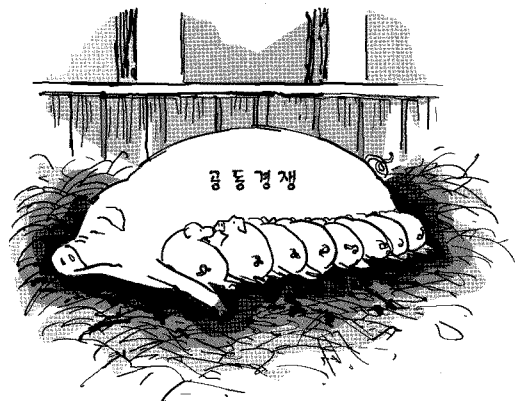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생하고, 기업과 소비자가 공생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민주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를 보존하고 키워가기 위함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인류가 발명해낸 가장 성공적인 사회경제제도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의 하나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노력의 대가가 확실히 주어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자유시장도 지켜질 수 없다. 그것은 수천 년간 지속되어 왔던 제로성장과 상시 빈곤으로의 회귀를 뜻한다.

그런데 최근 그와 같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중산층의 급감, 청년실업의 급증, 비정규직의 양산, 대·중소기업의 격차 확대, 골목상권의 피폐화, 경제 활력의 저하, 잠재성장률의 하락 등이 그것이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및 대기업의 과도하고 무차별적인 시장지배와 독점력 행사에 기인하는 바 크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희망 없는 내일이 되고, 우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중산층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정규직을 늘리고, 경제활력을 되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산층 형성의 근간이며 고용창출의 원천이고 혁신의 주체인 중소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유지·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길이다. 대·중소기업의 공생과 동반성장은 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의 하나이다. 시장경제의 근간인 공정경쟁의 준칙이 지켜져야 함은 당연하다.



비만과 소화불량은 자신과 이웃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 기업의 탐욕은 시장과 국가에 해를 끼친다. 우리 대기업들의 대변화를 기대한다.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세계 기축통화 논쟁 ... 그 앞날은?



3년전 느닷없이 중국이 국제 통화기금의 준비통화인 특별 인출권(SDR)을 슈퍼통화로 도입하자고 제안함에 따라 그동안 간헐적으로 논의돼 왔던 세계 기축통화 논쟁이 거세졌다. 특히 스탠더드 앤드 푸어

스(S&P)사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떨어뜨린 것을 계기로 이 논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 새로운 기축통화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전제돼야 한다. 하나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기축통화가 도입될 만큼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었는가와, 다른 하나는 그동안 기축통화 역할을 담당해 왔던 달러화가 과연 새로운 기축통화에 그 역할을 넘겨줄 수 있을 것인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 벌써 뉴밀레니엄 시대를 맞은 지 햇수로 10년이 넘었다. 지금까지 나타난 모습을 본다면 미국을 중심

으로 한 미주경제권,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경제권, 그리고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권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21세기의 세계경제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 최근 분위기다.

국제통화질서도 달러화와 유로화, 아시아 단일통화를 축으로 하는 3극 통화체제가 가시화돼 왔다. 최근 들어서는 전 세계를 하나의 화폐로 통용시키자는 세계단일통화 도입 논의가 일고 있어 주목된다. 라틴어로 '지구'를 뜻하는 테라(Terra)와 달러화의 사용범위를 넓히는 달러라이제이션, 유로화 도입을 모델로 한 글로벌 유로화 등이 그것이다.

3극 통화체제 가시화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단일통화를 도입해야 하는 여건은 어느 정도 성숙돼 가고 있고 이미 많은 방안이 논의됐다.

그렇다면 2차 대전 이후 기축통화 역할을 담당해 왔던 미국 달러화가 새로운 기축통화에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는 여건이 성숙돼 있는가 하는 점이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모기지 사태와 국가신용등급 강등조치를 계기로 달러 가치가 흔들리면서 1970년대 이후 미국과 아시아 국가 간에 묵시적으로 유지되어온 '제2 브레튼 우즈체제'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브레튼 우즈체제란 1944년 국제통화기금(IMF) 창립 이후 미국의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환본위 제도를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제 2의 브레튼 우즈체제란 1971년 닉슨의 금태환 정지선언 이후 '강한 달러-약한 아시아 통화'를 골간으로 미국과 아시아 국가 간의

목시적인 합의하에 유지해온 환율제도를 의미한다. 미국이 이 체제를 유지해온 것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공산주의의 세력 확산을 방지하고자 했던 숨은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급격한 환율변동 대비해야

그렇다면 제 2 브레튼 우즈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기축통화를 동시에 인정하는 통화체제가 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앞으로 새로운 통화체제가 다시 온다 하더라도 명시적인 합의형태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1980년대와 달리 각국 간 경기회복세 차이로 다른 국가들이 더 이상의 달러화 약세를 용인하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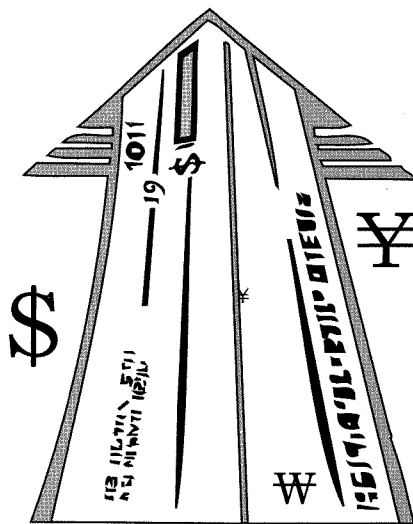
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내용도 많이 변했다. 1980년대에는 일본과의 무역불균형이 심해 플라자 합의도 엔화를 중심으로 한 미국 달러화 약세 유도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의 약 40% 정도를 중국이 제공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조치를 계기로 통화체제가 다시 올 경우 명시적이기 보다는 묵시적으로,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는 중심통화도 중국의 위안화에 초점이 맞춰지는 '수정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 정부가 기존의 기득권을 양보하고 출범 이후 줄곧 위안화 절상을 주장해 왔던 것이 같은 현실을 인식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으로 제 2 브레튼 우즈체제가 붕괴되고 수정된 형태의 통화체제가 올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하나는 원화 가치의 안전판이 무너진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과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감안할 때 2005년 7월에 단행된

고정환율제 포기 이후 위안화와 원화 간의 동조화 현상이 심해질 가능성이다.

한상춘

한국경제TV 해설위원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끝났지만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개표요건인 투표율 33.3%를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복지정책 대결에서 민주당이 1차 승리를 거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투표결과에 책임을 지고 시장직을 사퇴했다.

투표의 결과는 엄중한 것이다. 하지만 과연 반겨야 할 승리인가. '전면적 무상급식'을 막으려고 홀로 뒀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패배인가. 승리는 달콤해도 쓰디쓴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흔하다. 무상시리즈 빚장이 풀리면 국가적 재앙이 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라.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왜 나왔겠는가. 패배는 몰락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아름다운 패배'라는 말도 있다. 복지 포퓰리즘에 제동을 걸겠다고 한 시도는 평가해야 한다.

이번 주민투표는 단순히 서울시의 무상급식 문제가 아니었고 서울이라는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문제도 아니었다. 대한민국 복지의 길을 묻는 투표였으나 답이 나오지 않았다. 아쉽게도 복지 포퓰리즘을 막아낼 중대한 기회를 날려 보내고 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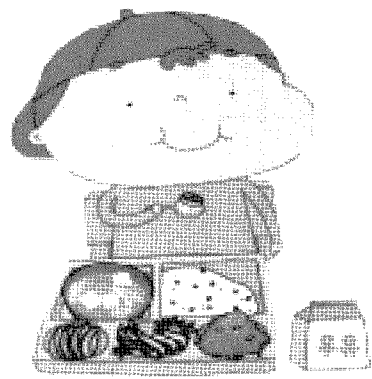
투표결과를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제 각기 해석을 달리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한국의 미래다. 민주당은 이번의 승리로 보편적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며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 주장을 펼칠 것이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망국적이라고 비판

하던 한나라당도 스스로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들어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치권 복지포퓰리즘 우려돼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를 둘러싼 진짜 싸움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벌어질 것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포퓰리즘이라는 망국의 급행열차를 타고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더 많은 혜택을 베풀겠다고 경쟁하려 할 것이다. 곡간 사정을 따질 겨를이 있겠는가.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는 게 정치권 아니던가. 그래서 더 많이 퍼주기 경쟁은 화려하게 펼쳐질 것이고 국민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게 곡간 사정 따지지 않는 퍼주기의 예정된 결과다.

지금의 세계경제위기는 수출로 버티는 한국경제에 치명적이다. 세계경제전쟁에서 패배하면 버틸 길은 없다. 세계경제 위기는 각국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에 따른 재정악화 때문에 발생했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서유럽의 경우가 다 그렇다.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재정지출을 늘려 복지천국을 향해 달리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는 게 오늘의 한국이다.



학생들에게 교육의 본질과 관계없는 점심먹이는 문제로 이처럼 시끄러운 나라가 또 있을까. 학교는 근본적으로 밥을 먹이는 곳이 아니다. 밥만 먹이면 아이들이 자라는 것도 아니다. 한국교육의 과제는 수두룩한데 학생들에게 공짜로 점심먹이는 일이 중요한 교육이슈가 돼있는 것 자체가 한심한 일이다.

능력에 걸맞게 복지 늘려야

복지확대가 좋은가 나쁜가를 묻는 건 어리석다. 복지 확대를 누가 반대하겠는가. 복지는 결국 돈 문제다. 재원 마련할 방안도 챙기지 않고 지속 가능한지도 외면하며 통 큰 복지만을 외치는 게 문제다. 고복지(高福祉)는 고부담(高負擔)의 다른 표현이다. 복지증대는 세금을 늘리거나 국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지고 국가부채는 다음 세대에게 빚더미를 안기는 것인데도 지금 외상으로 황소 잡겠다며 호기를 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무한정 퍼줄 수 있는 돈 보따리를 갖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가. 정부가 무엇이든 공짜로 해 줄 것이라고 말하는 건 일종의 기만이고 사기다. 국민이 공짜에 기대고 정부는 무한정 베풀기만 하던 영국이 앓던 병이 '영국병'이었다. 1980년대 영국의 대처수상이 영국병을 고치는데 앞장섰다. 지금 한국사회는 '영국병'을 뽑치는 '한국병'이 곳곳에 번져있다.

복지 광풍(狂風)을 막아내고 경제능력에 걸맞게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정치인은 왜 없는가. 세금을 많이 내주고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복지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이는 행동은 치졸하고 비겁하다. 정치인들이 복지를 들고 나오면 재앙이 온다는 건 이미 여러 나라의 경험에서 밝혀졌다.

복지 포퓰리즘은 망국으로 가는 내리막길을 복지천국을 지향했던 나라들의 몰락이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류동길

송실대 명예교수 · 경제학

금융쇼크 장기화에 대비해야



최근 세계 금융시장은 갑작스런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유럽 일부 국가의 심각한 재정위기가 동시에 나타나며 과히 쇼크(shock)라고 할 만한 충격을 겪고 있다. S&P의 美 신용

등급 강등 이후 글로벌 증시가 급락한데 이어 그리스와 스페인을 합한 것보다 규모가 큰 이탈리아마저 재정위기에 빠지면서 유럽발 신용경색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번 선진국발 쇼크는 아직 국내에는 주가급락 등 금융부문에만 충격을 줄 뿐 실물부문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쇼크의 전염성이 과거보다 훨씬 커진 상황에서 조그마한 충격에도 외화유출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조그마한 충격에도 외화자금 이탈 및 환율 급변동 등이 나타나 안심할 수 없다. 이러한 금융쇼크가 일시적이라면 실물경제에는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만일 반복되고 장기화된다면 생산·수출·소비 등 실물부문까지도 상당한 여파가 미칠

수 있다.

중소대출 축소 우려돼

특히 대기업에 비해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리먼사태와 버금가는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행태를 보면, 리먼사태가 터진 이후, 국내 시중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을 급격히 줄인 바 있다.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태도지수는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이전이었던 지난 2007년 1/4분기에 25에서 4/4분기에는 -28로 불과 3분기 만에 극과 극으로 바뀌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2008년 말 235조 1728억원에서 지난해 말 232조 4022억원으로 1.2% 감소했다. 반면 대기업 대출은 같은 기간 50조 6621억원에서 56조 1453억원으로 10.8% 증가했다. 금융쇼크에 중소기업이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을 겪는지 단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아직 확률이 낮긴 하지만, 금융쇼크의 반복과 장기화로 인해 향후 세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과거의 행태를 볼 때 일부 은행을 제외한 국내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의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시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중소, 재무건전성 높여야

따라서 가까스로 회복국면에 진입한 중소기업 경기가 재차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경기회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차제라도 금융쇼크가 장기화될 가능

성을 염두에 둔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정부는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둔화가 국내 중소기업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은 좀 더 상황변화를 지켜 본 후 신중하게 의사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중소기업 경기상황에 맞춰 신용보증 규모를 축소하기 보다는 증가시켜야 할 것이며, 패스트트랙 조치 등은 당분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금융권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을 우량기업 중심으로 신중하게 확대하고 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일시적인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경쟁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점은 우려할 만한 요인이다. 늘어난 대출규모와 글로벌 경기둔화로 향후 부실화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중소기업 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금융권의 자발적인 참여와 금융당국의 조율이 필요하다.

셋째, 중소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최근 금융위기 반복 가능성은 다른 어느 때보다 높게 전망되고 있어 재무건전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환율변동에 대한 헷지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미국 및 유럽 경기 위축에 따른 국내 수출시장 감소에 대비해 신흥국 시장진출 확대 등 수출지역 다각화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동학림

IBK 경제연구소장



경영지식이 경쟁력의 원천이다



경영학이 고교야구단 경영에도 도움이 되는데 우리 중소기업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

2010년 일본에서 202만부로 가장 많이 팔린 책 '모시도라(고교야구 여자매니저가 피터 드러커를 읽는다면...)'가 우리 중소기업에 주는 교훈이 있다. 이 책은 이렇다 할 성적을 내본 적이 없는 만년 하위 팀인 어느 고교 야구부의 매니저가 경영이론의 대가 피터 드러커의 책을 읽고 경영이론을 적용해 고시엔대회 정상에 도전하는 이야기이다.

매니저는 그의 역할에 대한 답을 드러커의 책에서 찾았다. 엉망이었던 팀 분위기가 경영이론을 적용하면서 살아나고 결승전에 진출하게 된다. 이 책이 주는 교훈은 '변화를 원할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라'와 '고객이 답'이다.

우리사회에 기본을 지키고 있는 곳이 있다면 학교와 병원이다. 몸이 아프면 병원의 처방을 받아 기

본으로 돌아가야 하고, 기업이 아프면 경영이론의 처방을 받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경영이론은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을 세계일류기업으로 만들었다. 3류 국제공항을 일류 인천국제공항으로 만들었던 것도 경영학의 고객만족 이론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평균수명이 29.1년 정도인데, 중소기업의 평균수명은 12.3년에 불과하다.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전문경영지식 활용도가 낮기 때문이다.

중소 경영이론 활용 낮아

토플러에 의하면 돈 못 버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지식의 충돌, 시간의 충돌, 공간의 충돌이 그것이다. 즉 진부한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obsolete), 다른 사람보다 행동속도가 느린 것(clash of speeds), 공간 활용이 좁은 것(stretching space)이다. 이것이 부의 미래를 결정짓는 세 가지 기반이다.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80세 정도인데 비해 아프리카 스와질란드인의 평균수명은 37.5세이다. 그 이유는 한국인이 스와질란드인보다 첨단 의학 지식의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우리 중소기업이 피터 드러커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기업 자문의 경험이 있는 필자로서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슈 대응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앞으로 중소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과의 원인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시대 변화를 읽고 고객에게서 답을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민 끝에 한국중소기업학회에서는 관심 있는 중소기업들과 손잡고 '경영자문을 통한 산학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했다.

경영이론, 성과에 도움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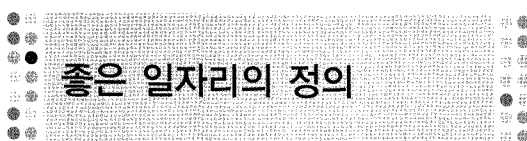
고교야구의 여자매니저가 피터 드러커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가 고교야구에 다가와 고시엔대 회의 기적을 만들어 주었듯이, 중소기업이 우리 학회를 불러주면 우리도 살면서 다가가 우리 중소기업의 성공을 만들어주고 싶다. 무료로 진행되는 우리학회의 중소기업 자문프로그램에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똑같은 세상이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 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와 '반이나 남았다'는 같지만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행동은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인간행동의 상대성이다. 최근 경제학에서는 수학적 인간관에 대한 도전으로 심리적 인간관이 강조되고 있다.

대표적인 이론이 200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니엘 카네만의 프레임이론이다. 프레임이란 세상을 보는 창문틀을 말한다. 창문틀이 세모면 세상이 세모로 보이고, 원이면 동그랗게 보인다. 우리 기업도 경영이론을 보는 프레임을 바꾸면 경영이론이 엄청난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아무쪼록 중소기업계와 학계가 손잡고 더 밝은 중소기업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가? 현재 세상에 퍼져 있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의는 '대학 졸업자에 걸 맞는 높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다. 이렇게 절대 평등주의에 입각한 포퓰리즘에 편승하는 좋은 일자리의 정의는 세상 어디에도 적용될 수 없다.

센달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한국에서 열병처럼 번지는 것도, 절대평등을 '정의'로 개념화하기를 원하는 욕구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정의'는 규범적 개념으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다만, 고대 그리스부터 계속된 학자들의 연구로부터 경제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정의는 두 가지다. 하나는 최저 임금이나 최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더 향상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서 가장 큰 문제는 타고난 능력이나 운이 너무 다른데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한 고등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했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아야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은 두 가지다. 하나는 타고난 능력이나 운으로 많이 벌어들이는 사람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해 국가가 강제적으로 소득 재분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자들 스스로 타고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에 물질과 재능을 기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불평등을 해결해 주는 이 두 가지 관점이 타고난 부와 능력으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척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 사회에는 사회적 존경의 기준에 대해 확고하게 공유된 지식이 없다.

타고난 능력은 개인과 그 가족이 출세하고 권력, 물질적 행복을 누리는데 이용되고 있지만, 그런 사람이 고위직, 정치인, 유명인사로 존경의 대상이 된다면, 한국의 도덕적 기준이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도덕적 기준이 만연해 있으면, 한국의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부가가치가 높은 좋은 일자리가 있지만 이는 전체 일자리에서 보면 소수다. 좋은 일자리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잘못된 도덕적 기준에 의해, 좋은 일자리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포기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갱거루’ 족이 될 것이다.

근로자 생활 향상시켜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의 정의는 ‘자신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일 것이다. 노력에 대한 보상은 근로하는 시간만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동안 얼마나 큰 부가가치를 창출했는가로 측정된다. 8시간 노동에서 낮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보상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간 보상의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것이 정치인과 대통령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맹목적인 무상급식보다 근로자들의 행복한 생애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데면, 한국의 부모들에게 교육열은 의식주 보다 더 중요하다. 굶어도 자식 교육을 시키는 덕택에 한국경제가 이 정도로 발전한 것이다.

생애 주기로 보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일자리의 공유지식을 만들려면, 정부와 국민은 세 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 우선 근로자의 자녀들이 높은 수준의 공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낮은 임금에서 과외수업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해야 한다. 두번째로 근로자들이 장기간 근로를 하면 주택 마련이 가능한 주택공급제도를 고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간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공적 연금수혜에서도 더 나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도 있다.

좋은 일자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좋은 기업인’도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